

김종우. 2019.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 『인권연구』 2(1): 1-33.

Kim, Jongwoo. 2019. “Human Rights as Social Representations” *Journal of Human Rights Studies* 2(1): 1-33.

[일반논문]

##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

: 차별금지법 관련 보도에 드러난 인권 담론을 중심으로\*

김종우\*\*

한글초록

이 연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생산된 인권에 관한 담론을 분석하여 인권이 한국 사회의 ‘상식’으로 쓰이는 맥락을 사회적 표상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다. 한국의 인권 담론을 분석하기 위해 차별금지법에 관한 2000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20년 간의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의 언론 보도 약 5,800건을 수집하여 말뭉치를 구축하였다. 말뭉치 분석은 대량의 문서 내용을 요약하기 위한 컴퓨터화 텍스트 분석방법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권은 다양한 층위를 가진 중층적 담론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단적인 사례는, 한국에서 인권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부정적 담론을 구성하는 담화 표상으로 쓰이는 양상이다. 인권이 차별과 배제의 담화와 혼합되어 쓰이는 양상은 인권이 일반화된 단일한 층위의 의미를 지닌 개념이 아닌, 중층적이며 쟁의적 개념임을 보인다. 동시에 인권이 행위자 집단의 내재적 규범에 따라 해석, 사용되며 특정 집단의 정체성, 이념에 의해 그 집단의 독자적 맥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인권의 반인권적 용례는 인권의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성격을 명료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

\* 본 연구는 2018년 연세대학교 대학원 연구장학금지원에 의한 것으로,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한국의 인권 담론과 정책」의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수정 및 보완한 글이다. 아울러 본 논문의 완성을 위해 상세하고 소중한 논평과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에 남아있는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임임을 밝힌다.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수료).

는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양극화된 방식으로 쓰이는 현상을 드러냄으로써 추후 인권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는 경험적 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주제어: 인권, 차별금지법, 담론, 사회적 표상, 텍스트 마이닝

---

— 목 차 —

- I. 문제 제기
- II. 이론적 논의
- III. 연구방법과 대상
- IV. 결과
- V. 논의와 결론

## I. 문제 제기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학술적인 추상적 언어, 지식이 아닌 일상의 언어, 상식으로 쓰인 역사는 길지 않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두 음절 어휘는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상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말하는 인권의 모습은 어떠하며 그 내용은 어떻게 채워져 있는가. 이 연구에서는 발화 대상, 담론으로서의 인권의 모습을 포착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도화 과정의 담론에 주목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오랜 논쟁은 한국 사회에 산적한 여러 쟁점을 드러낸 역사적 과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담론 중, 이 연구에서 주목한 담론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말하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낸 인권에 관한 담론이다. 이 연구에서 차별금지법에 주목한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그 자체로 인권의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만

컴 인권의 담론을 포괄하는 텍스트이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오랜 기간의 논의는 한국 사회가 인식하는 인권의 의미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좋은 텍스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이 점에 주목하여,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 개념을 토대로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상식(common sense)으로서의 지식이라는 범주에서 담론으로 발화되고 쓰이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인권의 보편성에 관한 오랜 논쟁에서 드러나듯, 인권의 쟁의적 성격이 드러나는 방식을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생산된 텍스트를 통해 분석할 것이며, 이를 위해 사회적 표상 개념을 차용한다. 사회적 표상은 인권의 극성이 조직 내의 지식, 규범을 통해 규정되는 방식을 보일 수 있는 유용한 이론적 자원이다. 이 연구에서 인권은 다양한 의미로 쓰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극성을 가지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언론 보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도, 인권이 텍스트를 통해 담론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이는 언론 보도의 장르 특성 때문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인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고 있었고, 언론 보도는 다른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 블로그, 카페 등)가 생산한 텍스트에 비해 그러한 논쟁을 정형화된 양식과 정제된 수사로 생산하는 장르적 텍스트 때문이다.

이 연구는 인권의 담화적 용법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수행했다는 차별점을 갖는다. 특히 여기에서는 기존의 질적 텍스트 분석에 관한 보완적 분석방법으로 컴퓨터화된 자동화 텍스트 분석의 방법을 접목하여, 장기간 대량으로 생산된 텍스트를 분석하고 있다. 기존의 차별금지법, 혹은 인권 담론에 관한 연구의 역사적, 질적 텍스트 분석에 기초한 담론 분석의 방법은 시간, 자원의 등의 문제로 대량의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 분석하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이러한 기존 인권 담론 연구의

한계를 일정 부분 극복하려는 방법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같은 최근의 텍스트 분석방법을 적용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오천여 건 이상의 언론 보도 텍스트 속에서 차별금지법과 인권에 관한 키워드를 추출할 수 있었고, 특정한 단어가 문맥 내에서 어떤 단어와 의미적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사회적 표상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소개하고 사회적 표상 이론이 이 연구의 분석대상에 적용될 수 있는 지점을 검토한다, 이후 연구의 대상인 차별금지법에 관한 언론 보도 자료의 성격과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주요 분석 기법으로서의 텍스트 마이닝에 관하여 서술한다. 그리고 연구의 주요 결과인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의 특성과 인권이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양상, 표상의 형성 기제에 관하여 추론한 결과를 서술하였다.

## II. 이론적 논의

이 연구가 기대고 있는 사회적 표상 이론(social representation theory)은 프랑스의 사회심리학자인 모스코비치(S. Moscovici)가 구체화하였다. 모스코비치가 사회심리학과 사회적 관계, 권력의 문제를 제기한 이래(Moscovici, 1972)로 사회적 표상 이론은 권위주의에 관한 연구와 함께 집합적 정체성에 관한 연구의 주요 이론적 자원을 제공했다. 특히 사회적 표상 이론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상식(common sense)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진보적(progressive)인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다(Bauer and Gaskell, 2008: 335).

사회적 표상 이론의 핵심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개별 행위자 수준의 집합적 차원, 즉 집합적 행위자로서의 조직 수준의 사회심리적 동학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 있다. 둘째는 특정한

과학적 지식이 일반 사회에서 수용, 해석, 사용되는 방식의 작동 기제를 규명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사회적 표상이라는 이론의 명칭을 통해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사회적 표상 이론은 집합적 행위자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사회적(social)이며, 과학적 지식이 그대로 일상 언어로 통용되지 않고 그것의 이미지, 혹은 일부 속성의 현상적 측면을 반영하여 재생산한다는 점에서 표상(representation)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표상 이론은 “행위자가 세계를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연구”이며, “태생적으로 권력 관계의 재생산에 관한 이론”의 성격을 지닌다(Howarth, 2006: 79).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표상 이론은 모스코비치도 서술한 바와 같이 뒤르켐의 집합적 표상(collective representation)을 철학적 배경으로 삼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사회적 표상은 집합적 표상과도 다르고, 버거와 루크만(Berger and Luckman, 1966)이 제시한 문화사회학의 현상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논의와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다. 뒤르켐은 집합적 표상 그 자체에 주목하며 집합적 표상을 연구하기 위한 심리학이 아닌 사회학의 역할을 주장했지만(뒤르켐, 2001), 사회적 표상은 뒤르켐의 집합적 표상과 달리, “사회적 표상과 표상의 형성 기제를 분석대상”으로 삼고, 표상화 과정의 매커니즘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Moscovici, 1988: 218). 동시에 그는 사회적 표상 이론이 뒤르켐의 집합적 표상에서 드러나는 사회학의 독자성을 추구하며, 분과학문 중심의 기획과 달리, 학제적 연구를 추구하는 ‘새로운’ 사회과학임을 강조한다(Moscovici, 1988: 218).

표상은 사회 내 집합적 행위자의 내재적 규범, 문화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수용된다. 동시에 표상은 특정 관념을 고착시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표상의 내용은 가변적인 성격을 가진다(모스코비치, 1996). 사회적 표상은 행위자의 인지 모델에 개입하며 집합적 행위자 내부의 정체성, 이데올로기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를 해석할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인지적 프레임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회적 표상은 특정 조직 내에서 공유하는 사회화된 양식과 규범은 아비투스<sup>1</sup>와 마찬가지로 사회화된 지식의 성격을 가진다. 특히 이 지점에서 담론은 사회적 표상이 특정 조직의 지식으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사회적 표상 이론의 사회적 성격은 이론에 관한 논쟁의 중심이기도 하다(Voelklein and Howarth, 2005). 주요 논쟁점은 사회라는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에서 나타나는 이론의 모호성(Potter and Wetherell, 1987)에 대한 비판이나, 사회 개념을 잘못 적용한 인지적 환원주의(Jahoda, 1988), 혹은 사회결정론(Parker, 1987)이라는 비판 등이다. 이 중 이론의 모호성은 사회적 표상이 과학적 실증성을 갖추지 못한 이론이라는 비판과 닿아 있다. 이는 사회적 표상 개념이 미국 심리학의 핵심 철학인 실증주의 과학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는 모스코비치의 해석적 과학의 기획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학과 세계에 대한 역사주의적 과학으로서의 사회심리학을 추구했던 관점에서 엄밀한 조작적 정의와 객관화를 추구하는 자연과학의 태도는 인간과학과 같을 수 없고, 같아서도 안 된다는 기존 딜타이, 가다머 등의 해석학적 전통을 따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표상 이론의 잠재성을 이론에 내재한 비판적 속성으로부터 찾고 있기도 하다(Howarth, 2006).

연구자가 사회적 표상 이론의 사고하는 방식과 논증하는 방식의 동일성에 관한 가정에 주목하며, 이 연구에서 인권을 사회적 표상으로써 분석하고자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회적 표상 이론을 인권에 관한 지식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하였다. 첫째, 인권에 관해 논증하는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인권을 사고하는 방식을 추론할 수 있다. 사회적 표상 이론은 집합적 행위자가 세계를 조망하는 인지적 모델에 관한 이론으로서, 행위자가 사고하는 방식은 행

위자의 특정 가치에 대한 논증을 통해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을 제공한다. 둘째, 사회적 표상이 집합적 행위자가 자신의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을 모형화한다는 점에서 세계에 대한 인지적 성격을 보여준다. 이는 사회적 표상 개념을 통해 학술적으로 정의하고 논의하는 인권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내용 체계는 일상 언어로 사용되는 인권의 내용 체계와 다르다는 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 Ⅲ. 연구방법과 대상

#### 1. 방법

사회적 표상을 담론을 통해 포착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텍스트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여기에서는 다수의 텍스트 분석을 위해 기존의 내용분석에 더하여 최근 사회과학적 담론 분석의 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다. 텍스트 마이닝은 대량의 텍스트로부터 정보를 요약하는 방법이란 점에서 기존의 질적 텍스트 분석과 접하는 지점이 있으나, 알고리즘을 활용한 자동화된 코딩과 계산 과정을 통해 대량의 텍스트를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000년 초까지도 자연어 처리 복잡성, 높은 맥락의존성 등으로 인해 기계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은 고도의 연산 능력을 요구하는 “매우 복잡하고 곤란한 과제(Hearst, 1999: 3)”였지만 최근에는 연산 성능의 비약적 발전과 함께 말뭉치(corpus) 기반의 언어학이 빠르게 성장하였다. 다양한 알고리즘 개발을 통해 자연어 처리 역량도 급속도로 발전했고, 이를 통해 더욱 타당성 있는 텍스트 처리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기법이 지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문서에 사용된 어휘의 문맥적 의미 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워드 임베딩(word

embedding) 방법인 ‘word2vec’을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워드 임베딩은 텍스트를 연산 가능한 숫자로 치환하여 벡터화하는 방법의 하나로, 2013년 구글에서 발표한 방법론이다(Mikolov, Chen, Corrado and Dean, 2013). ‘word2vec’은 단어를 벡터화하는 과정에서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보존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안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정 단어 양쪽의 단어를 통해서 특정 단어의 원소값을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경우 비슷한 맥락에서 쓰인 단어는 특정한 문맥에서 의미 유사성이 클 것이라 가정한다. 예를 들어 ‘A는 밥을 먹었다.’, ‘B는 과일을 먹었다.’, ‘C는 치킨을 먹었다’라는 문장이 있을 때, 밥, 과일, 치킨은 다른 단어지만 양쪽의 단어를 고려할 때 문맥적으로 유사한 단어로 추정할 수 있다. ‘A는 밥을 먹었다’를 ‘A는 치킨을 먹었다’로 고치더라도 의미는 충분히 보존된다. 이러한 가정을 토대로, 스킵그램(skip-gram)<sup>1)</sup> 방식을 통해 세 가지 층위(layer)<sup>2)</sup>로 구성된 신경망 모델을 통해 학습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단어의 문맥적 유사성을 추정한다. 여기서 문맥적 유사성과 의미 유사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벡터값을 갖는 단어는 문맥 앞뒤로 비슷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슷한 벡터값이 유사한 의미가

---

1) 스킵그램(skip-gram) 알고리즘은 분석대상 단어(target word) 양쪽의 단어의 수 만큼(‘window’라고 표현) 묶은 후 한 단계씩 움직여 (window sliding) 단어를 학습한다. 연속단어집합(Continuous Bag of Word) 방식과 달리, 학습 대상이 되는 문장 내에서 문장 전후의 단어 수(window size)에 따라 분석대상 단어(target word)를 교체해가며 학습하기 때문에 벡터 업데이트의 횟수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트하나키, 2018: 253).

2) word2vec은 “입력층(input layer), 잠재층(hidden layer), 결과층(output layer)의 세 층위”를 가진다. 여기에서 사용하는 스킵그램(skip-gram) 알고리즘은 입력층(input layer)에 분석대상 단어(target word)가 입력되며, 맥락 단어(context word)가 결과층(output layer)에 나타난다. 이때 분석대상 단어(target word)는 독립변수, 맥락 단어(context word)는 종속변수로 설정한다(트하나키, 2018: 246).

있다는 것과 구분된다. 유사한 벡터값은 단지 특정 단어가 쓰인 문장의 문맥 내에서 비슷한 벡터값을 가진 단어들도 비슷하게 사용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즉, 매우 제한된 맥락에서 의미의 유사성을 추론할 방법이라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앞서 사례로 든 문장에서 ‘밥’, ‘과일’, ‘치킨’은 다른 단어이다. 하지만 문맥에서의 위치를 볼 때, 이 세 단어는 ‘먹는 것’이라는 대상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파이썬(Python 3.7.2)을 통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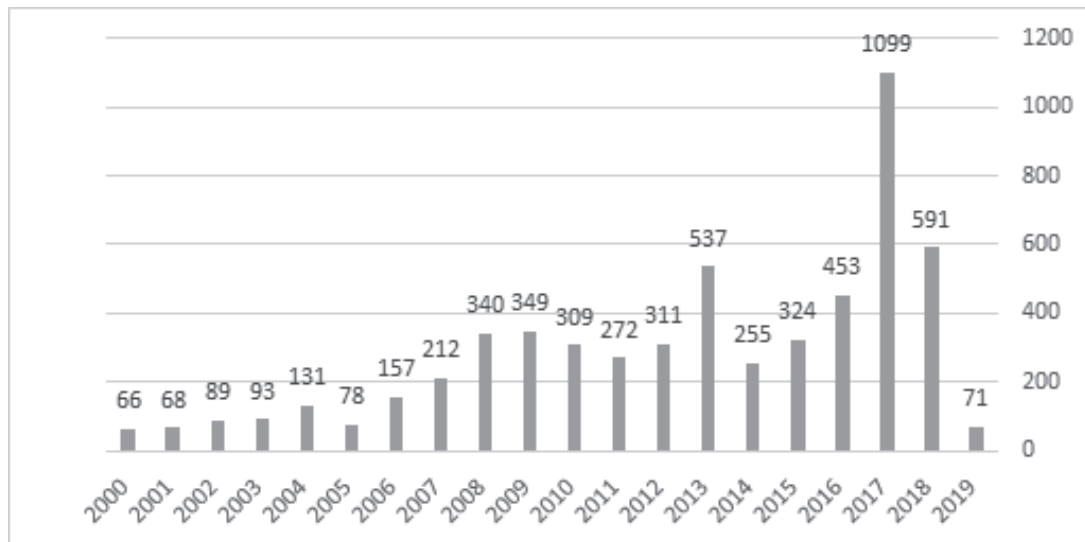
## 2. 자료

연구의 자료로 사용한 텍스트는 언론 보도(기사, 방송 스크립트)로, 언론 보도의 수집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이며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기사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언급이 등장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였다.<sup>3)</sup> 저자가 수집한 언론 보도(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 전체 5,805건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위한 코퍼스를 구축하였다. 수집한 언론 보도의 유형은 중앙일간지 3,684건, 경제일간지 1,848건, 방송사 273건에 해당하는 기사를 수집하였다. 언론 보도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한 키워드는 단독으로 혹은 연산자를 통해 조합하는 방식을 통해 입력하였다. 사용한 검색 키워드는 ‘차별금지법’, ‘인권’, ‘차별+금지법’, ‘포괄적+차별+금지법’으로, 각 검색어를 통해 사용한 검색 결과 중 가장 다른 검색어의 검색 결과를 포괄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최종 검색 키워드로 선정하여 기사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기사 중 차별금지법과 직접 관련

3) 현재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일반적 차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김대중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설치 과정에서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다. 차별금지법의 정부 내의 논의는 2002년 관련 TF 설치 과정에서 본격화되었으나, 관련 논의는 2000년 무렵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없는 기사는 연구자의 검토를 통해서 선정 후 정리하였다. 기사 유형은 연성, 경성뉴스 구분 없이 수집하였다.<sup>4)</sup> 수집한 기사는 형태소 분석을 통해 명사의 어간 추출(stemming), 불용어(stopword) 처리 등의 과정을 거쳐 전처리 절차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 구축한 코퍼스로 분석을 수행했다. 형태소 분석은 KoNLPy 패키지를 통해 처리하였다.

<그림 1> 분석대상 언론 보도의 연도별 보도 건수



\* 주: 2019년은 2월까지의 수집자료 통계임

자료를 수집한 연도별 보도 경향을 살펴보면 차별금지법에 관한 텍스트가 증가하는 시기는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던 시기<sup>5)</sup>와 일치한

4) 연성 뉴스(soft news)는 문화, 스포츠, 여행 등 주로 무겁지 않고 일상적인 주제를 다루는 기사를 의미하며, 경성 뉴스(hard news)는 정치, 경제, 사회 등 상대적으로 무겁고 심각한 주제를 다루는 기사를 의미한다. 한국의 신문은 경우 정치, 경제, 사회 지면은 주로 경성뉴스가 배치되어 있고, 문화, 생활, 스포츠지면은 연성뉴스를 다루는 경향이 있다.

5) 차별금지법은 17대 국회에서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정부안과 입법부안을 포함하여 총 6회 제안되었다. 이 중 17대, 18대 국회에서 제안된 법안

다. 차별금지법이 입법 예고되고, 금지대상 차별의 범주 중 성적 지향의 문제가 부상한 2007년 이후부터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사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한다. 그 이후에도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제안된 시기별로 관련 보도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 중 예외는 2017년의 국면이다. 2017년은 대통령 탄핵과 그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이 진행된 시기로, 당시 대통령 후보 토론회 과정에서 군 동성애, 동성결혼 등의 이슈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각 후보자의 견해에 관한 텍스트가 생산되었고, 대선이라는 커다란 정치적 이벤트와 연결되며 높은 보도 횟수로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인권을 다룬 기사의 수는 언론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단일 언론사 중 가장 많은 차별금지법 관련 기사를 다룬 곳은 「국민일보」(906건)로, 전체 언론사의 보도 수 대비 약 1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겨레」(755건)와 「경향신문」(665건)은 「국민일보」에 이어 차별금지법에 관한 가장 많은 기사를 보도했다. 이 세 언론사가 생산한 기사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전체 보도의 약 40%를 차지한다. 분석을 위해 선정한 23개 언론사 중 3개 언론사에서 생산한 기사가 차별금지법에 관한 보도 대부분을 차지하는 멍함수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전체 유료발행 부수<sup>6)</sup> 중 35.2%를 차지하는 언론사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사를 거의

---

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19대 국회에서 제출된 안은 의원 철회로 폐기되었다. 여섯 가지 법안의 제안 시점과 발의안의 의안번호는 다음과 같다. 2007.12.12.(178002호), 2008.1.28.(178162호), 2011.12.2.(1814001호), 2012.11.6.(1902463호), 2013.2.12.(1903693호), 2013.2.20.(1903793호).

6) 2017년 전체 일간지 발행 부수는 9,631,921부로, 이중 발행 부수 상위 3개 언론사(35.2%)인 「조선일보」(1,458,614), 「동아일보」(959,260), 「중앙일보」(970,968)의 발행 부수는 3,388,842부이다. 이에 비해 「한겨레」(232,025), 「경향신문」(192,237), 「국민일보」(185,879)는 6.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한국 ABC협회, 2019).

생산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이에 비하여 경제일간지에서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사를 주요 일간지와 유사하거나, 더 많은 수준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보도 양상은 이후 결과 분석에서 차별금지법 제도화 과정의 주요 행위자 사이의 정치, 문화적 자원 획득을 위한 갈등과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보이는 과정에서 그 맥락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사의 40%가량을 생산한 「국민일보」, 「한겨레」, 「경향신문」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주요 쟁점인 성적 지향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언론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차별금지법과 그 안의 인권에 관한 담론은 행위자, 특히 여기에서 주목하는 개신교 우파, 소수자, 기업 등의 집합적 행위자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집합적 행위자의 정체성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인지적 틀로서의 사회적 표상으로 인권에 관한 다른 해석이 존재하며, 그 양상은 상당히 극단화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 IV. 결과

### 1. 인권 담론의 양극화와 그 맥락

#### 1) 인권 담론의 양극화 양상

인권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여러 층위의 의미를 부여받은 어휘이다. 인권의 의미에 관한 규정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여러 담론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에서 인권 담론의 다양성은 일정하게 고른 분포를 보이기보다, 특정 쟁점을 중심으로 양극화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인권에 관한 전통적 논쟁인 보편성과 특수성, 상대성에 관한 논쟁이 한국의 인권 담론 내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인권 담론의 양

극화 양상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텍스트 내에서 인권이 발화되는 방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의 담론화 방식을 언론 보도에 관한 텍스트 마이닝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였다.

<표 1> ‘차별금지법’과 ‘인권’의 문맥적 의미유사도

target word= ‘차별금지법’	유사도	target word= ‘인권’	유사도
국회	0.106998	교회	0.089876
인권위	0.100319	장애인	0.074818
차별금지법	0.0944	비정규직	0.044072
교회	0.084013	동성애	0.041777
장애인	0.052753	유엔	0.038993
대통령	0.029948	문재인	0.032983
문재인	0.017224	여성	0.02787
고용	-0.00074	인권위	0.021511
장애	-0.00779	정책	0.017775
대선	-0.0139	대통령	-0.01638
동성애	-0.01823	교육	-0.01955
권리	-0.02841	국회	-0.02223
혐오	-0.03456	시각장애인	-0.0402
여성	-0.05059	권리	-0.04611
비정규직	-0.05762	대선	-0.07316
유엔	-0.05788	차별금지법	-0.07542
정부	-0.06933	혐오	-0.07951
인권	-0.07542	장애	-0.08129
반대	-0.08647	정부	-0.09274
시각장애인	-0.08914	반대	-0.09666
정책	-0.10012	성소수자	-0.13841

\* 주: target word는 분석대상이 되는 어휘로, 해당 단어를 중심으로 다른 단어와의 문맥적 유사도를 계산한다.

차별금지법과 인권의 문맥적 의미 유사성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 단어의 문맥적 의미의 유사성을 추론하기 위해 적용한 word2vec 분석 결과<sup>7)</sup>, 차별금지법과 인권은 상반된 유사도를 보인

다. 상반된 유사도는 두 단어가 문맥적으로 반대되는 방식으로 쓰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두 어휘 사이의 유사도 차이가 클수록 두 어휘 사이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두 어휘가 쓰이는 맥락이 배타적일 수도 있음을 뜻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인권이 차별금지법과 의미적 유사성이 높지 않다는 점, 즉 인권과 차별금지법이 상반된 문맥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밖에 인권과 상반된 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단어의 목록을 살펴보면, 인권이 주로 어떤 어휘와 문맥적으로 유사한 맥락에서 쓰이는지 추론할 수 있다. 인권과 문맥적으로 유사한 맥락에서 쓰인다는 의미는, 문장에서 인권이 들어갈 자리에 다음 단어를 대치하더라도 문맥에서 의미의 유사한 정도가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인권이 쓰이는 문맥과 상반된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어휘는 ‘권리’, ‘차별금지법’, ‘혐오’, ‘장애’, ‘성소수자’, ‘반대’ 등으로 나타난다. 단적으로, 이 어휘들은 인권과 거리가 먼, 즉 부정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을 수 있음을 뜻한다. 차별금지법도 인권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차별금지법의 사용 맥락과 상반된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는 ‘권리’, ‘혐오’, ‘인권’, ‘반대’로 나타난다.

이는 차별금지법과 인권 양쪽에서 각각 인권과 차별금지법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임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이다. 위의 분석 결과는 다수의 문서에서 차별금지법과 인권을 다른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결과이다. 차별금지법과 인권이 상이한 맥락에서 사용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과 인권의 두 개념이 상호 친화적이라는 전제와 달리, 두 개념이 배타적으로 쓰이는 맥락이 존재할

7) 이 분석에서는 스킵그램(skip-gram)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학습을 위한 연계 단어의 수(window size)는 전후 2단어로 지정하였다. 학습 과정에서 10회 미만으로 등장한 단어는 학습과 결과보고에서 제외하였다.

수 있다는 점을 뜻한다. 즉, 위의 결과만을 토대로 해석한다면 다수의 언론 보도에서, 문맥의 의미적 유사함을 고려하였을 때, 인권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담론 내에서 ‘성소수자’, ‘혐오’, ‘반대’와 같이 부정적인 의미로 담론화되는 양상을 일정 부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은 역설적이게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담론을 생산하는 행위자와 이념적 친화성이 존재하는 사회적 표상일 수 있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 이는 앞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보도가 특정 언론사를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연결된다. 특정 언론사에서 집중적으로 인권과 차별금지법을 상반된 맥락에서 사용할 경우, 인권을 차별금지법 등 기존의 인권과 친화성이 있는 개념이라고 여겼던 어휘와 거리가 멀게 나타날 수 있다. 인권은 특정한 이념과 정체성을 보유한 행위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 텍스트의 내용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인권이 어떠한 방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 인권 담론 양극화의 맥락과 특징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위의 word2vec을 사용한 어휘의 문맥적 의미 유사성 결과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맥락에서 인권이 발화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위의 결과는 어휘 중심의 결과만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텍스트 마이닝의 결과는 인권이 차별금지법과 다른 맥락에서 쓰이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제공했을 뿐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출발점으로 하여, 인권의 담론화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이 어떠한 사회문화적 기제 위에서 형성되었는지 분석하였다.

“모름지기 민주국가, 인권국가라면 최소한 이런 원초적 차별

과 불평등을 용납해선 안 된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각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권유하고 있고, 대부분의 인권선진국이 그런 법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이번에도 차별금지법 입법이 좌절된다면 우리나라는 인권후진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sup>8)</sup>

“대한민국이야말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사회적,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있는 나라다. 무엇이 부족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려 하는가. ……그런데 왜 구태여 동성애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과잉 보호를 하려 하는가.”<sup>9)</sup>

위의 두 사례는 인권이 양극화된 방식으로 발화된 텍스트이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는 ‘민주’, ‘인권’, ‘원초적 차별’과 같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강조하는 표현과 함께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안을 토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인권 국가의 달성이라는 목표는 인권 보장이라는 대전제, 그리고 인권 보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소전제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는 논증 구조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반대의 사례이다. 여기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동성애자라는 소수자 집단에 국한된 권리를 지칭한다. ‘역차별’과 ‘제한’은 그들의 인권의 범주를 한정하고 정당성을 위협하기 위한 수사로 쓰이고 있다. 두 텍스트는 각각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에 관한 호명을 통해 인권의 개념을 우리의 권리와 그들의 권리로 이분화하는 특징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인권은 자신의 권리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개념이면서, 타자의 권리 정당성을 공격하는 담화 전략을 구

8) “차별금지법은 인권국가 of 최소한의 조건” 『한겨레』 (2013.4.12.)

9) “한국교회, 차별금지법부터 막아야” 『국민일보』 (2016.7.10.)

성하는 핵심 개념이다(김종우, 2017).

“동성애가 인권 아닌 성적 취향.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 동성애자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의 부도덕한 성적 취향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것이 인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보편적 가치(Universal value), 공동선(Common good), 공공선(Public good),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기준에게 맞아야 한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행복추구권을 거론하면 동성애도 보편적 인권이라 주장하고 있다.”<sup>10)</sup>

“Q: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다. △전 변호사=그렇다.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항목이 그것이다. 이는 국가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 법이 합법화되면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북한정권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국회와 중요공직에서 자유롭게 적화활동을 할 것이다. …… 이런 차별금지가 어린 학생들의 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 사회질서 유지, 국가 안보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나라를 무너뜨리고 어린 학생들의 인권과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위협하는 교묘한 차별금지법에 국민들은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sup>11)</sup>

인권은 차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쓰이기도 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인권과 차별은 구분되는 가치로 표상화 된다. 인권은 ‘우리’로 대변되며, ‘우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수한 대상에게 적용(예를 들어, ‘어린 학생’, ‘국민 대다수’)되는 가치로 서술되고 있다.

10) “유력 대선 후보들, ‘동성애’ 보호해야 할 인권인 양 포장” 『국민일보』 (2017.1.25.)

11) “국회 계류 3건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동성애나 사회해약 이단 사이비도 비판할 수 없게돼” 『국민일보』 (2013.3.26.)

이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은 타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반인권의 인권적인 모순적 텍스트로 담론화된다. 여기서 인권은 사회적 표상으로 작동하며,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우리’의 정체성과 이념을 위협하는 차별로부터 저항하기 위한 신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집합적 투쟁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논증 구조는 일견 소수자 정치의 담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가 존재한다. 정치적 권위주의와 종교적 보수주의의 결합은 매우 광범위한 동의에 기초한 담론적 수행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이들의 담론에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반대 담론에서 차용하고 있는 반공주의적, 보수주의적, 시장주의적 발화는 더욱 광범위한 온건한 보수주의 세력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념적 보편성, 선명성 양자를 포괄할 수 있는 담화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종교적 보수주의와 정치적 권위주의의 관계는 한국에서 특수하게 등장하는 이데올로기적 특징은 아니다. 아도르노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파시즘에 관한 분석을 통해 성향으로서의 권위주의에 관한 논의를 전개한 이후(Adorno, 1950) 권위주의에 관한 연구는 종교성과 권위주의의 친화성에 관한 지표를 구축한 알트마이어의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구체화하기에 이른다(Altemeyer, 1988). 이후 사회심리학과 인지심리학 연구를 통해 행위자의 성향으로서의 권위주의는 개신교 우파와 같은 종교적 권위주의<sup>12)</sup>의 친화성을 보고한 연구는

12) 종교 보수주의와 근본주의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양자는 엄밀하게 구분할 때 다른 개념으로 쓰여야 한다. 근본주의(fundamentalism)는 이성의 역할을 부정하고 신념, 믿음을 강조하면서 종교적 이상을 정치적 수단을 통해 획득하려 한다는 특징(닐센, 2012)이 있다. 이와 달리 보수주의(traditionalism)는 근본주의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강한 세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근본주의보다 정치 참여적 성격이 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의 개신교 우파는 미국의 개신교 우파보다 근본주의 보다는 보수주의적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기독교 등이 정당 정치의 공간으로 진입하려는 양상이나, 이들이 생산하는 담론의 양상을 볼 때 근본주의적 색채가

지속하여 생산되고 있다(Altemeyer, 2003; Blogowska, Lambert, Saroglou 2013). 이들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적 성향을 우익 권위주의(right-wing authoritarianism)로 정의하고, 우익 권위주의 성향의 특징 중 하나로 사실 여부와 관계없는 이념에 대한 강한 신념이 나타남을 꼽고 있다. 즉, 특정한 행위자의 믿음 체계 속에 형성된 이념은 객관적인 지식보다는 집합적 정체성 속에서 구축, 정당화되는 사회인지적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인식론적, 실존적, 관계적 위협에 관한 민감성을 갖고 있어 우리 밖의 타자에 관한 적대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인권이 차별금지법 반대 담론에서 독자적인 개념과 정의를 가진 관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인권이 하나의 의미에 귀속되는 단일한 기표가 아니라는 점을 보인다. 오히려 차별금지법 반대 담론에서의 인권은 소수자의 인권에 대항하는 인권으로 규정되며, 왜곡된 방식으로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왜곡된 방식으로 정당성 획득의 기표로 사용되는 인권은 역설적이게도 차별금지법에 관한 정치적 숙의를 가로막는 언어로 등장하게 된다.

“집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되는 동성애 동성혼 옹호, 조장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국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군형법 폐지소송 단장이었던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군형법 폐지법안을 제출한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을, 동성애물을 유해 매체물에서 제외시켰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을 임명했다”면서 “이념화된 인권, 가짜인권을 두둔하는 인사 임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sup>13)</sup>

점차 강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13) “동성애 비판 ‘가짜뉴스’로 몰아가려는 시도 반대한다” 『국민일보』 (2018.10.4.)

이러한 맥락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인권 담론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행위자의 인권 담론 때문에 억압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대표적인 사례가 위의 기사 인용에서도 등장하는 ‘가짜인권’이라는 표현이다. ‘가짜인권’은 차별금지법을 소수자에 의한 다수의 차별을 용인하는 법률로 담론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표현이다.<sup>14)</sup> ‘가짜인권’이라는 표현은 긍정적 자기 제시/부정적 타자제시의 발화 전략이 인권 담론을 통해 담론화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가짜인권’이라는 표현이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인권에 관한 논의를 이분화하고, 이분화된 인권에 관한 논의는 인권에 관한 공통의 담론을 형성할 수 없는 조건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진짜’ 인권과 ‘가짜’ 인권이 발화 상으로 분리된 시점에서, 인권에 관한 담론은 기존 담론의 질서를 따를 수 없게 된다. 특히 인권의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담론을 전개해온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도한 행위자의 관점에서 ‘가짜인권’이라는 발화 전략은 매우 적대적인 담론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 2.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

### 1) 양극화된 인권 표상의 문제

차별금지법은 인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차별금지법이 국가인권기본계획(NAP)의 주요 정책이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입법을 주도한 사실과 별개로, 차별 철폐는 근대적 인권 개념이 등장한 이후 인권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홍성수, 2018).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라는 두 극점 사이의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인권은 하나의 합의된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권의

---

14) 이러한 논의를 모아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단행본이 출간되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참조(백상현, 2017)

협의, 광의적 사용이다. 인권의 협의적 사용은 주로 조례, 법률이나 국제규약 등 법체계 내에서 인권을 정의하는 방식이다. 협의의 인권 담론은 이른바 인권의 교과서적 정의에 해당한다. 여기서 인권은 근대적 권리의 한 범주이며, 기본권과 인권은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둘은 구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반면 광의의 인권은 인권을 사실상 권리 범주 일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다(Cho, 2010). 예를 들어 광의의 인권 담론은 민법상의 소유권, 점유권과 같은 권리 개념도 인권이라는 용어를 가져와 사용한다. 동시에 인권 이론 내에서 합의된 인권 개념에 관한 비판적 접근도 광의의 인권 내에서 드러나는 특징 중 하나이다.

“사실 차별이란 범위를 넓히자면 한도 끝도 없다. 가령, 한 회사 내에서 사장과 평사원의 책상크기와 방 규모가 다를 경우 이는 차별 아닌가. 또 윗사람은 말을 낮추고 아랫사람은 경어를 쓰는 것이 통상적 생활양식일진대, 이를 차별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법안의 입법자는 무엇이라 답변하겠는가. 이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차별’ 문제는 ‘인권’과는 별도로 취급한 지 오래됐다. 다양한 학설과 이론이 워낙 많아 제대로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sup>15)</sup>

위의 칼럼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사유로 차별금지의 입법이 인권과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담론에서 등장하는 가장 큰 특징은 인권의 범주를 선택적으로 설정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인권의 범주는 고전적인 인권의 세대 구분처럼 역사적으로 유동적인 특징이 있었던 만큼 그 자체로 특수한 현상은 아니다. 인권을 담론적 구성물로 보고자 하는바 역시, 인권이 보편성과 일반성을 추구하지만, 그 보편과 일반의 내용은 근대 이후 지속해서 확장되

15) “[사설]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위험성과 몰상식” 『국민일보』 (2013.3.14)

어 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인권의 협의적 개념을 강조하는 견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때 차별은 고전적 인권 침해의 문제와 연관되지만, 고전적 인권침해와 구분되기 한다. 이러한 인권 담론에서는 차별이 분명히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지만, 무엇이 차별인지 규정하기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래 인용문에서 등장하는 차별의 상대성이 그 사례이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한 사회에서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바로 ‘차별’이다. 차별은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 등 사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국가에 의한 고전적인 인권침해보다 문제 양상이 훨씬 복잡하다. 일례로, ‘고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되지만, ‘차별’은 그 자체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새 정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국가의 수준이 ‘모범’이라고 불릴 만한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sup>16)</sup>

하지만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담론은 차별 범주의 모호성, 인권의 가소성을 언급하면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협의의 담론과 하나의 큰 차이를 보인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담론 내에서 인권의 범주는 확장이 아닌 선택과 축소의 경향을 보인다. 위 사례에서도 인권 관련 입법에서 차별금지를 위한 입법은 별도의 문제로 분리된다.

“성소수자 인권이 종교자유와 양심적 자유의 가치나 인권보

16) “[세상 읽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차별금지법 제정” 『한겨레』 (2013.3.31)

다 우위에 놓으려는 시도는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건전한 시민정신이나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다수의 사람들이 역차별은 물론 범법자로 몰리고 있는 슬픈 상황이다. 인류의 보편적인 상식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해괴한 프리섹스운동이 일상화 되고, 적극적인 법 논리로 다수의 시민과 교회를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는 것이다.”<sup>17)</sup>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담론에서 드러나는 인권 담론의 특징은 인권 사이의 범주를 설정하고 그 범주에 따른 위계를 상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위계는 담론을 생산하는 행위자의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에 의해 구성된다. 예를 들어, 위 인용문을 살펴보자. 기본권에 대한 논의에서 권리의 경중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존재하고, 더 중요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권리 침해를 용인해야 한다는 해석과 마찬가지로, 인권 내에서도 범주 사이의 위계가 있다는 해석을 전제한다. 하지만 그 위계 구성의 원리는 해당 담론을 생산하는 행위자의 집합적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성 소수자 인권을 종교자유와 구분되는 인권의 항목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차별금지법은 종교자유와 성 소수자 인권을 대립시키고, 성 소수자를 우위에 놓는 입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집합적 정체성은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사회적 표상의 구실을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이 구성하는 인권 담론의 효과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 2)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과 배제의 담론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은 생명 정치(bio-politics)의 장에서 좀 더

17) “한기총, 한교연, NCKK 즉각 해체시켜 하나로 출범해야. 교회언론회 논평” 『국민일보』 (2016.5.18.)

명료하게 드러나고 작동한다. 생명 정치는 한국의 보수주의 내에서 생산하는 다양한 타자 혐오(난민, 성소수자, 이념, 젠더 등)의 언어의 기저에 깔린 배경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혐오 표현 자체는 비물질적 언설이지만, 폭력, 배제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수행성을 담고 있기에 물리적인 폭력성을 가질 수 있다. 동시에 혐오 표현은 많은 경우 혐오 대상의 신체성을 격하하는 방식으로 생성된다. 생명 정치는 인종주의 등의 정치적 혐오가 오염과 위험한 유기물에 대한 혐오, 메스꺼움의 감정 토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 우익 보수주의의 혐오 표현과 접점이 존재한다(김왕배, 2017).

“최 목사는 “동성애는 도덕성과 윤리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근본적 창조질서에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동성애자의 인권을 주장하지만, 이것은 인권문제가 아니라 사회 윤리적 문제”라며 “사회규범과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할 때 동성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또 “특히 군대에서 동성애가 양성화되면 군대의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미래의 기강이 흔들린다”고 덧붙였다.”<sup>18)</sup>

성적 지향을 둘러싼 논란은 인권의 생체권력과 생체정치가 작동하는 방식을 바로 보여준다. 성적 지향의 문제에서 동성애의 ‘허용’, ‘합법화’라는 표현을 통해 성소수자의 배제를 부정하는 담론을 비판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담론은 주로 개신교계 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여기서 ‘동성애’는 주로 ‘에이즈(HIV)’와 연결되며, 동성 관계에 의한 신체의 오염과 질병의 확산이라는 담론을 의학적 담론과 결합한다. 이러한 담화 요소들의 결합은 차별금지법이 공중의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의료화 담론으로 구체화한다.

신체를 없애려는 권력(제정 반대 담론 생산자 중 보수적 개신교계)

18) “동성애 논란(上) 교계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나” 『국민일보』 (2010.11.29)

과 신체를 긍정하려는 권력(제정 찬성 담론 생산자) 사이의 대립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차별금지법 담론은 종교적 근본주의가 배제하면서 동시에 자리를 잡으려는 권력의 장소로서의 신체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사례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차별금지법은 인권을 둘러싼 일종의 점유, 소유 투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권력의 대상으로서의 인권의 성격이 나타난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인권 그 자체(인권이라는 표상, 기표)가 아니라 인권의 담론으로 구성된 연관된 기의에 대한 사회적 표상 사이의 투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차별금지법의 찬성과 반대의 두 담론이 숙의의 과정을 거쳐 정치적 타협의 담론을 생산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된 것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차별금지법 반대 담론과 같이 인권을 반인권의 개념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집합적 행위자의 담론은 이 행위자의 가치와 신념의 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인권은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는 지식으로서 개념화되고, 이러한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은 이들의 가치와 신념의 체계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다시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을 강화한다. 즉, 인권을 둘러싼 담론의 양극화는 문화,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이익을 선취하려는 담론적 갈등임과 동시에, 그 가치와 신념의 투쟁이기도 하다. 현재의 인권을 둘러싼 담론의 지형은 광범위하게는 인권, 구체적으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행위자 간 갈등의 준거는 가치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이는 인권에 관한 공론장에서의 정치적 숙의 과정을 진행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결국, 모두가 인권을 말하고 사용하지만, 인권의 의미에 관한 공론장은 아직 형성되지 못한 상태이며, 오히려 인권에 관한 상호 간 이해의 틈이 벌어지는 양상이 한국 인권 담론의 현재로 볼 수 있다. 인권 담론의 분화와 차별금지법과 같은 인권 관련 제도의 도입을 어렵게 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의 쟁의적 성격과 사

회적 표상의 역할로 일정 부분 설명할 수 있다. 인권의 정치적 쟁의성은 인권의 의미가 고정불변의 보편성을 전제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이론적, 경험적 구성물임을 의미한다. 인권은 절대적이거나 “인간 상호간의 규범이라기보다는 정치적 규범”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니켈, 2010: 6).

하지만 인권의 가소성에 관한 논의는 이론적으로 새로운 논의는 아니다. 인권의 보편주의 논쟁 및 역사성에 관한 기존의 논의(헌트, 2009; 텔벗, 2011), 인권의 최소/최대주의적 정의에서 나타나는 인권의 중층성(Cho, 2010; 조효제, 2015), 인권에 관한 학술적 담론의 다양성(Dembour, 2010) 등 인권이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그 내용이 끊임없이 재구성, 갱신됐다는 점은 지속해서 논의됐다(Stammers, 1999; Thornhill, 2008). 앞서 분석한 인권의 일상적 쓰임에 관한 이 연구의 분석 결과도 이러한 인권의 가소성, 쟁의적 특성을 뒷받침한다. 이는 인권을 수용하는 방식이 행위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러한 차이는 행위자의 인지 체계 등 사회에 관한 가치, 관점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Cohrs et al., 2007; Greenwald and Pettigrew, 2014; Koo, Cheong, and Ramirez, 2015).

## V. 논의와 결론

사회적 표상은 그 사회에서 통용되는 상식에 관해 질문한다(Purkhardt, 1993). 한국 사회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상식으로서 논의하는 방식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성원의 수만큼 다양할 수 있다. 인권을 지식으로 수용하고, 일상의 다양한 담화적 상황 속에서 인권을 말하게 될 때, 인권은 그 수용자가 인지하는 세계에 관한 스키마(schema)에 의해 재구성된다. 과학적 지식으로서의 인권이 일상적 지식의 담화가 될 때, 두 지식으로서의 인권의 무게는 같지 않다. 사회

적 표상으로서의 인권에 주목한 이유도 여기에 존재한다. 앞선 분석을 통해서 인권이 담론화된 지식으로서 수용, 표현되는 방식을 사회적 표상 개념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인권이라는 하나의 기표가 존재하지만, 기의(記意)라는 기표의 내부 공간은 중층적이고 유연한 양상으로 보인다. 인권의 기의는 다양한 행위자의 정체성과 이념을 반영하는 사회적 표상으로 채워져 있었다.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 내재하고 있는 의미의 한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표상으로서의 인권 담론은, 인권 정책에 관한 접근과 대중적 담론에 관한 고려의 균형이 필요하지만, 그 균형점의 위치에 대한 의문을 남기기도 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상식’적인 지식으로 담론화된 인권의 의미와 위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인권이라는 기표가 상식으로 자리 잡고, 그 내용은 사회적 표상으로서 다양한 행위자의 정체성이 반영된 독자적 지식으로 구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권리 침해에 관한 권리를 인권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표상은 분명 존재한다.

그리고 그 표상의 발화적 수행성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어 형사적 절차에 따르는 피의자 권리의 문제에 관한 논란에서 차별금지법의 사례에서 등장한 인권 담론의 사회적 표상이 유사한 내용과 논증 방식을 갖추고 재생산되고 있다. 인권이 직면한 현실은 국제규범과 사법제도, 정책의 영역에서 이러한 인권 담론의 다양한 대중적 이해와의 소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과제이다. 이 지점에서 인권 정책의 입안과 인권에 관한 일상적 지식의 관계(학술적, 과학적 인권과 일상적 인권 담론의 괴리)에 관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분석 수준에서 차별금지법과 인권 담론의 엄밀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 담론을 차별금지법에 관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담론을 통해서 구성된 인권의 담론에 관한 분석으

로 규정할 수 있다. 둘째, 연구 자료의 측면에서 텍스트의 장르적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히 연구 자료가 언론 보도에 국한된 한계로 인해 사례에 관한 두꺼운 기술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존재했다. 셋째, 분석방법의 측면에서 공시적, 통시적 분석이 혼합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에 관한 전체 시기를 하나의 시점으로 상정하고 분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회적 표상 형성의 기제에 관한 인과적 설명을 시도하기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는 추후 시계열 토픽 분석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논문접수일: 2019.04.30, 논문심사일: 2019.05.21, 게재확정일: 2019.05.21)

## 참고문헌

- 김왕배. 2017. “혐오 혹은 메스꺼움과 배제의 생명정치.” 『사회사상과 문화』 20(1): 49-111.
- 김종우. 2017. “인권 담론의 유형과 제도의 변동: 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7(4): 171-203.
- 닐스 닐센. 2012. 『종교근본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한귀란 옮김. 서울: 글로벌콘텐츠.
- 린 헌트. 2009. 『인권의 발명』. 전진성 역. 과주: 돌베개.
- 백상현. 2017. 『가짜 인권, 가짜 혐오, 가짜 소수자』. 서울: 밝은생각.
- 세르주 모스코비치. 1996. 『군중의 시대: 대중심리학에 대한 역사적 고찰』. 이상률 옮김. 서울: 문예출판사.
- 에밀 뒤르켐. 2001[1938]. 『사회학적 방법의 규칙들』. 윤병철·박창호 옮김. 서울: 새물결.
- 윌리엄 텔벗. 2011. 『인권의 발견: 어떤 인권이 보편적인가』. 은우근 옮김. 과주: 한길사.
- 잘라지 트하나키. 2018. 『파이썬 자연어 처리의 이론과 실재: 효율적인 자연어 처리를 위한 머신 러닝과 딥러닝 구현하기』. 이승준 옮김. 서울: 에이콘출판주식회사.
- 제임스 니켈. 2010. 『인권의 좌표』. 조국 옮김. 서울: 명인문화사.
- 조효제. 2015. “애국주의/국가주의 대 인권.” 『내일을 여는 역사』 58: 118-129.
- 한국ABC협회, 2019, “2018년도 일간신문 발행 유료부수 [2018.12.7.]” 2019년 4월 2일 접속, [www.kabc.or.kr/about/notices/100000002742](http://www.kabc.or.kr/about/notices/100000002742).
- 홍성수. 2018.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이화젠더법학』 10(3): 1-38.
- Adorno, Theodor. 1950. “*The Authoritarian Personality*.” New York: Harper & Row.
- Altemeyer, Bob. 1988. “*Enemies of Freedom: Understanding Right-wing Authoritarianism*.”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
- Bauer, Martin and George Gaskell. 2008. “Social Representations Theory:

- A Progressive Research Programme for Social Psychology.”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38(4): 335-353.
- Berger, Peter and Thomas Luckmann. 1966. “*The Social Construction of Reality: A Treatise in the Sociology of Knowledge.*” Harmondsworth: Penguin Books.
- Blogowska, Joanna, Catherine Lambert, and Vassilis Saroglou. 2013. “Religious Prosociality and Aggression: It’s Real.”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52(3): 524-536.
- Cho, Hyo-Je. 2010. “Two Concepts of Human Rights in Contemporary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39(2): 301-327.
- Cohrs, Christopher, Jürgen Maes, Barbara Moschner, and Sven Kielmann. 2007. “Determinants of Human Rights Attitudes and Behavior: A Comparison and Integration of Psychological Perspectives.” *Political Psychology* 28(4): 441-469.
- Dembour, Marie-Benedicte, 2010. “What are Human Rights: Four Schools of Thought,” *Human Rights Quarterly* 32(1): 1-20.
- Greenwald, Anthony, and Thomas Pettigrew. 2014. “With Malice Toward None and Charity for Some: Ingroup Favoritism Enables Discrimination.” *American Psychologist* 69(7): 669-684.
- Hearst, Marti. 1999. “Untangling Text Data Mining.” in *Proceedings of the 37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Maryland: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 Howarth, Caroline. 2006. “A Social Representation is Not A Quiet Thing: Exploring The Critical Potential of Social Representations Theor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5(1): 65-86.
- Jahoda, Gustav. 1988. “Critical Notes and Reflections on ‘Social Represent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195-209.
- Koo, Jeong-Woo, Byeong-Eun Cheong, and Francisco O Ramirez. 2015.

- “Who Thinks and Behaves According to Human Rights?: Evidence From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Survey.” *Korea Observer* 46(1): 53-87.
- Mikolov, Tomas, Kai Chen, Greg Corrado, and Jeffrey Dean. 2013. “Efficient Estimation of Word Representations in Vector Space.” *arXiv preprint arXiv:1301.3781*. 2013(Sep, 7): 1-12.
- Moscovici, Serge. 1972. “Society and Theory in Social Psychology.” In: Joachim Israel and Henri Tajfel (Eds). *The Context of Social Psychology*. London: Academic Press.
- Moscovici, Serge. 1988. “Notes Towards A Description of Social Representation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3): 211-250.
- Parker, Ian. 1987. “Social Representations: Social Psychology’s (mis)use of Sociology.” *Journal for the Theory of Social Behaviour* 17: 447-470.
- Potter, Jonathan, and Margaret Wetherell. 1987. “*Discourse and Social Psychology: Beyond Attitudes and Behaviour*.” London: Sage.
- Purkhardt, Caroline. 1993. “*Transforming Social Representations: A Social Psychology of Common Sense and Science*.” London: Routledge.
- Stammers, Neil. 1999. “Social Movements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21(4): 980-1008.
- Thornhill, Chris. 2008. “Towards a Historical Sociology of Constitutional Legitimacy.” *Theory and Society* 37(2): 161-197.
- Voelklein, Corina, and Caroline Howarth. 2005. “A Review of Controversies about Social Representations Theory: A British Debate.” *Culture & Psychology* 11(4): 431-454.

<Abstract>

## Human Rights as Social Representations

: Discourses on Human Rights in The Anti-Discrimination Act  
of Korea\*

Kim, Jongwoo\*\*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scourses on human rights produced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anti-discrimination act of Korea by social representation theory.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spect of polarization of human rights discourse. In order to analyze the discourse of human rights in Korea, the author collected about 5,800 articles on the anti-discrimination act from 2000 to 2019 from major Korean newspaper and other mass media to construct corpus. The corpus analysis conducts through a text mining analysis, which is an automated text analysis method for summarizing a large number of the docu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human rights have the character of polarized discourse with the socio-political context. In particular, human rights in Korea reveal aspects of discourse that constitute a negative discourse on the anti-discrimination act. This result shows that human rights are not a universal concept but a controversial concept with layered meaning. Also, human rights have the character of social

---

\* This research was partially supported by the Graduate School of YONSEI University Research Scholarship Grants in 2018. This paper contains a part of the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currently under review.

\*\* Ph. D candidate, Sociology, Yonsei University.

representation as interpreted and used according to the intrinsic norm of organization. This result is meaningful as empirical research that can be useful in the process of enacting human rights policy by revealing the discourse that ideas of layered human rights in Korean society.

Key words: Human rights, anti-discrimination act, discourse, social representation theory, text mining